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1('22-12) | 2022. 12. 01.

대북 핵전략, 대전환해야 살 수 있다.
김기호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추진하자
김열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문성묵

대북 핵전략, 대전환해야 살 수 있다.

김 기 호

(강서대 교수, 둘하나연구소장)

올해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11월 18일 기준 벌써 63회 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18일에는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는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발사 했다. 정상각도(30~40도) 발사가 아닌 고각발사로 재진입 절차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하나, 단 분리와 정상비행 등을 볼 때 사실상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군의 증원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여 전술핵을 완성한다면 북한은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ICBM' 즉 '개별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 시험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한 4천~5천톤급 핵추진잠수함(전략원잠, SSBN)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SLBM)을 곧 성공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곧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ICBM, MIRV, SLBM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가 2021년 4월 13일에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의 공동보고서는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다 242기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핵무기 30~60기(미국 정보기관 추산치)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기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기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위장 평화 쇼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환상에 가득찬 지도자와 친북정권을 이용하고 과시욕에 넘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추겨 '비핵화 협상 쇼'를 벌이면서 핵무기를 2배 넘게 증가시켰다. 이를 가리켜 금세기 최고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Mearsheimer) 교수는 국제현실(International Realities)을 모르는 자유주의자들의 헛된 꿈(Liberal Dreams)이자 '대환상(The Great Delusion)'이라고 꼬집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다. 지난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아예 법제화했다. 이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북한 비핵화 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1972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4자회담, 6자회담과 지난 정권에서 부추긴 미북 양자회담 등 북핵협상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북한은 9·19, 2·13 등 많은 거짓 합의를 반복해오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핵무력을 증강하는 데 이용해 왔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남한 전역을 3분대에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타격하여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이미 신형 미사일 4종 세트(극초음속 · KN-23 ·KN-24·순항미사일)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사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 대부분 변칙기동과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빈틈을 저고도 비행을 하기에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에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여 사전 준비시간 없이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걸려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국가의 존망을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200여 기의 다양한 핵미사일로 하와이, 괌은 물론이고 워싱톤을 비롯한 미국 전역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때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지 의문이다. 이것을 핵억제이론에서는 "최소억제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1~2대 도시를 파괴시킬 핵능력만 갖고 있다면 핵강대국의 보복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공격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기습공격을 통하여 한국을 정복하여 적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2인자이며 대남·대미담당 김여정은 11월 24일 '서울이 과녁'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3축체계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다종화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음속의 몇 배 이상의 속도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부터 종말단계까지 전 궤적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군의 공중·해상·육상 기반 감시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새롭고 고도화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 직선 탐지방식의 우리 레이더는 둥근 지구의 만곡도 및 한반도의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해 탐지 범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하여 자위적 선제타격한다는 킬체인(Kill Chain)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정확한 탐지-감시-추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공백지대가 많다. 미사일 방어는 고고도에서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방어지역에 대한 중첩방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로 고고도 수도권 방어 공백을 허용하면서 남한 전역의 1/2~1/3 정도만 방어할 수 있다. 최근 한국형

미사일 요격무기인 L-SA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고무적인 일도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대북 핵전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위험한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 아직도 "김정은이 비핵화 할 것이다"라는 헛된 환상과 망상에 가득찬 자들이 정치, 사회, 대북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2021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2만 3000 원으로 한국의 1960년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48만 2000원으로 남북한 격차는 무려 28.4배이다.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뜻하는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지난해 북한이 36조3000억 원으로, 한국(2049조7000억원)의 58분의 1(1.7%)에 그쳤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북핵 위협에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안타까운 자화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북 핵전략을 획기적으로 대전환을 하기 전에는 생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현실주의(Realis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핵보유국에 대하여 비핵보유국은 상대가 될 수 없다면서, 비핵보유국은 항복하거나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다음과 같은 큰 틀의 전략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핵무기 사용권을 움켜쥔 김정은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참수작전능력'을 시급히 완비해야 한다. 동시에 점진적 독자 핵무장으로 나아가 핵 억제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핵전략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원자력을 자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원전 사용후 핵연료를 일본처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유사시 즉각 플로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Pu-239도 확보하고, 포화상태로 처리가 힘든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처리하며, 원전 연료로도 재사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이다.

둘째, 우라늄 235를 20% 수준 및 그 이상으로 농축한 전략원잠을 구비해서 전략원잠(SSBN)에서 핵미사일을 발사(SLBM)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전략원잠에 빈 라덴을 잡은 미해군의 특수부대인 Navy SEAL을 태우고 다니듯 우리도 김정은을 잡을 최정예 특수부대를 태우고 북한 앞바다 속을 휘젓고 다녀야 한다.

셋째, F-35A/B 스텔스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전략폭격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김정은을 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시에 김정은 동선 상공에 비무장 스텔스 공격(Dry) 무력시위로 확실하게 겁을 주어야 한다.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한국호는 대북 핵전략을 획기적으로 대전환해야 살 수 있다. 미국과 중·러의 대립이 격화되는 신 냉전질서에 편승해 북한이 더욱 핵미사일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추진하자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0월 초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그러자 폴란드와 스웨덴 총리도 지난 달 자국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언급, 그리고 러시아 핵무기 배치를 위한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이 잇따르자 나토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것이다.

나토는 회원국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핵기획그룹(NPG)이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책 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한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나 곧 회원국이 될 핀란드와 스웨덴은 NPG의 틀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담보 받으면 된다. 그런데도 이 국가들이 굳이 핵무기 배치를 운운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나토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모든 회원국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태리, 튀르키예 등 5개국에만 15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결국 내 땅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다. 핵무력 사용의 5대 조건이 있지만 대단히 임의적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비핵전하에서도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정은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대한 훈련지도 까지 끝냈다. 11월 18일에는 화성 17형 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이 올 초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을 포함해서 40회를 넘는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통일 준비는 거의 마쳤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제54차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공약과 실행이라면 충분히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다. 2021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지지했다. 또한, 올해 8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내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핵기술을 보면 핵개발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가성비도 높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 핵무장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이자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개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확산방지조약(NPT)이라는 틀을 흔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외교적인 고립과 경제제재를 견뎌내야 한다.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보는 더 어려워지고 살림은 더 궁핍해지게 된다. 따라서 핵무장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나토식 핵공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내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공갈 위협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한국 때리기도 감소시킬 수 있고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극복해야 할 난관도 있을 것이다. 핵무장에 비하면 이런 난관은 난관도 아닐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핵 공유 정책을 폐기하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김정은은 전술핵무기로 우리를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더해 이를 즉각 이행할 수 있는 태세도 과시했다.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즉, 자위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왜 일본까지 끌어 들이냐며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이는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해 본다.

자위력을 강화와 한미동맹 공고화는 국가안보의 기반이다.

2018년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 입장 발표로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었다. 한미는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연합연습인 키리졸브(KR), 포이글(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고 지휘소 연습으로 명맥만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진전이 없었고, 김정은은 이 기회를 악용하여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했다.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된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은 더욱 강력해지는데 한미연합 억제력은 더욱 약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관련 정찰자산 및 타격역량 등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이어졌다. 5월 한미 정상은 연합연습의 정상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을 합의했고, 8월에는 실병기동이 수반된 UFS 한미연합연습이 정상화되었다. 9월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단 방한과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훈련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10월말~11월초 한미연합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9월 29일부터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하고 우리 주요 기지와 지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도발에 나섰다.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보면,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상황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까지 대담하게 발사하고 노후된 공중전력까지 동원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나, 11월 초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한미연합 억제력에 조금도 밀리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다량의 방사포를 9.19 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하는 도발을 이어갔다. 이제 김정은은 7차 핵실험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1월 13일 한미일 정상이 만나 프놈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재확인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했다.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가장 원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우리보다는 정찰자산이 뛰어나고 대잠능력이 탁월하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미동맹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개소가 소재해 있다. 과거 6.25 전쟁 당시에서 유엔군의 병력과 장비들이 일본을 통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관리의 역할과 함께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의 역할을 한다. 북한이 입만 열면 유엔사 해체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일본은 우리와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분명 아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꾸준히 해결해 나가되 안보 및 경제 등 국익을 위한 협력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 이익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 자기 세력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 얼마 전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이 시행되자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냐? 친일 매국행위가 아니냐? 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런 지적을 좋아할 사람은 바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일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다면 이런 언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